

건전재정포럼 제35차 정책토론회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건전재정포럼 제35차 정책토론회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건전재정포럼 제35차 정책토론회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건전재정포럼

2012년 이래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자 재정 분야 전직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건전재정포럼은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각종 정책제안 및 공론화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국가운영전략에 대한 각종 연구와 시대에 필요한 Agenda Setter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학술적 접근을 지양하고 ‘공론(公論)의 장’에서 국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이를 통한 사회적 Impact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07566)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등촌동, 강서IT밸리) 705호
T: 02-786-7799 Email: srpark@nsi.or.kr 홈페이지: www.nsi.or.kr

일시 2022년 11월 3일(목) 14:30~17: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

주최  건전재정포럼

건전재정포럼 제35차 정책토론회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일 시 2022년 11월 3일(목) 14:30~17: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

주 최  건전재정포럼

진행순서

* 사회: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고문 (前 국무조정실장)

~ 14:30	등록 및 감염병 예방 조치
14:30~ 14:40	인사말 ◦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건설교통부 장관)
14:40~ 15:00	주제 발표 :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고병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정치경제철학 3학년
15:00~ 16:20	지정토론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백경훈 청사진 대표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16:20~ 17:00	질의 및 종합토론

주제 발표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고 병 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정치경제철학 3학년

건전재정포럼 인식조사 청년에게 궁금한 6가지 질문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고병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정치경제철학 연계전공 3학년

조사 개요

기간 2022.9.27(화) ~ 2022.10.13(목)

대상 20대 청년 115명

문항 6개

01 국민연금은 ()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빙하 시한폭탄 신용불량자 넓은 동아줄 마르는 샘물

밑 빠진 독 개혁대상 해변의 모래성 구멍난 저금통

선착순 세대갈등 카운트다운 폭탄 돌리기 못 받는 돈

01 국민연금은 ()이다.

시한폭탄 : 모두가 터질 것을 알고 있고 터질 시점까지 알고 있는데 누구도 해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및 행정가의 직무유기입니다.

넓은 동아줄 : 생산가능인구보다 피부양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 이상 믿고 의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밑 빠진 독 : 현재의 청년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유의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기성세대 부양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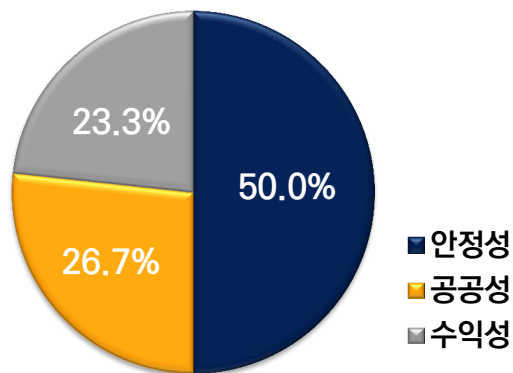
01 국민연금은 ()이다.

해변의 모래성 : 전국민 다단계. 유튜브에서 본 표현입니다. 달라진 인구구조에 맞춰 투자방식이나 구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곧 무너질 것입니다.

세대갈등 : 기금 확보 방안은 없고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혜택을 보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폭탄돌리기 : 현재 시점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미래세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02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50.0%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 수익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모두 소용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최소 원금 보장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할 필요는 있으나 지나친 수익성을 추구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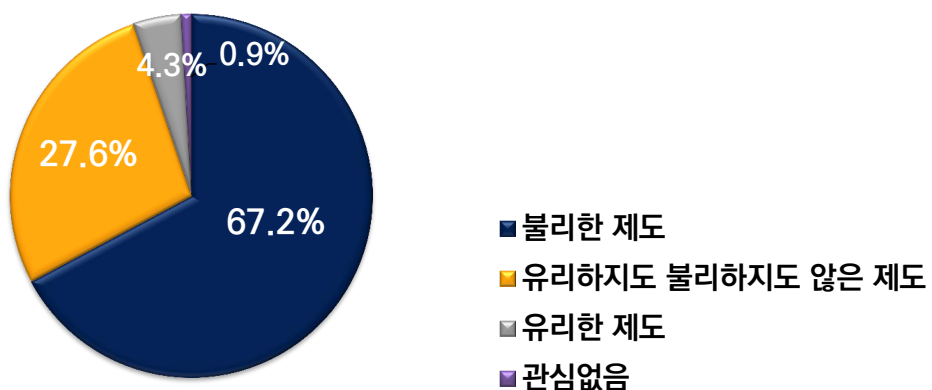
26.7%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

- 공적인 제도인 만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자산 운용은 공공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은 GDP의 40%가 넘게 쌓여있고 이러한 막대한 금액은 매우 큰 파급효과를 지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인데, 운용과정에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복지라는 원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23.3%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

- 공공성, 안정성 다 따지다가 고갈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고갈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게 나은 선택입니다.
- 국민들의 최후의 노후 대비책이므로 사람에 따라 안정적 운용을 우선시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펀드는 충분히 자산을 다각화해서 운용하므로 금융위기 처럼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아니고서는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플랜을 제외하고는 최선의 수익을 추구하는 편이 앞으로의 기금 운영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03 국민연금은 청년에게 유리한/불리한 제도인가?



67.2% 불리한 제도이다.

-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며 고갈의 위험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 이미 20대 30대는 노후설계에 국민연금을 반쯤 배제하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은 인구변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납입한 만큼 받지 못할 게 분명하며 우리의 자녀 및 손주세대들에게는 더 크게 불리한 제도일거라 생각합니다. 2040년에 연기금 고갈로 인해 국내주식에서 연기금이 빠질 경우 파장 또한 막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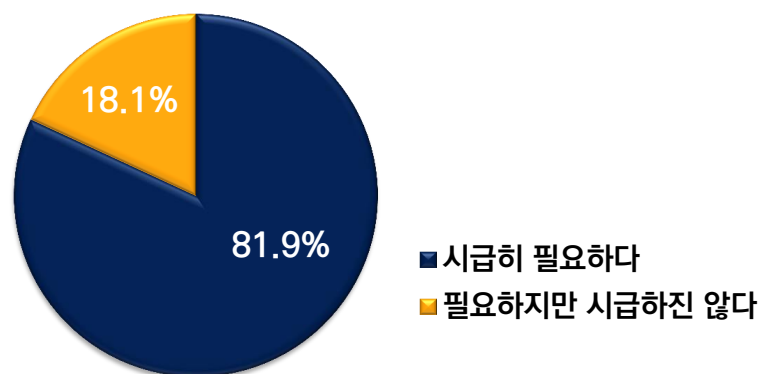
27.6%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제도이다.

- 청년들도 미래에는 수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언제까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기금이 고갈되어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므로 지급 불능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며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납입 대비 혜택만을 생각하면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해 필요한 재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지출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4.3% 유리한 제도이다.

- 먼 미래를 생각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4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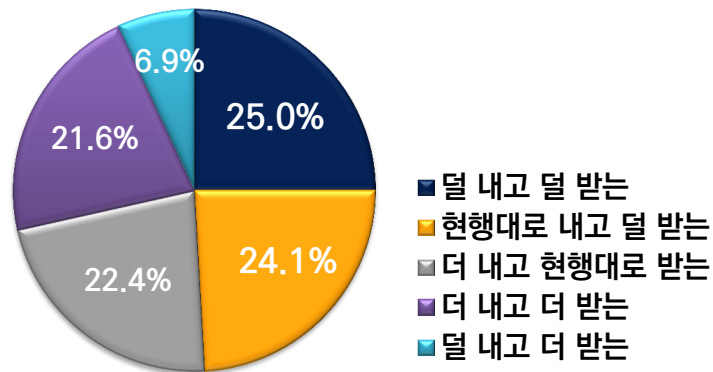
81.9% 시급히 필요하다.

- 개혁이 빠를수록 개혁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미뤄질수록 대비할 시간이 줄어들어 개혁 강도가 더 강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고 곧 받을 세대를 포함하여 개혁의 부담을 분담해야 합니다.
-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에 지출되는 예산이 지금보다 몇 배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급히 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 개혁을 위해 필요한 논의와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후순위로 밀려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1% 필요하지만 시급하진 않다.

-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아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 크게 바뀌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은 잘 작동하고 있으니 시급하지는 않고 미래의 고갈은 서서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 어떤 형태의 개혁을 선호하시나요?



25.0% 덜 내고 덜 받는다.

-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범주만 다루고 이외에는 개인연금 등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전부 보전해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에 아주 기초적인 보조 수단으로써만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초연금 등 선별적 복지를 촘촘히 하는 것과 정년연장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4.1%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다.

-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은 부수적인 것이고 다른 수단으로 노후를 대비할 생각입니다.
- 지나친 보험료율 인상 대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만을 보장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득에 대해선 스스로 소득 중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 내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아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2.4%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다.

- 소득대체율이 40% 이하라면 국민연금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며 현행 9% 보험료율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는 유지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 기금이 점점 고갈됨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경우 재정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 내거나 덜 받거나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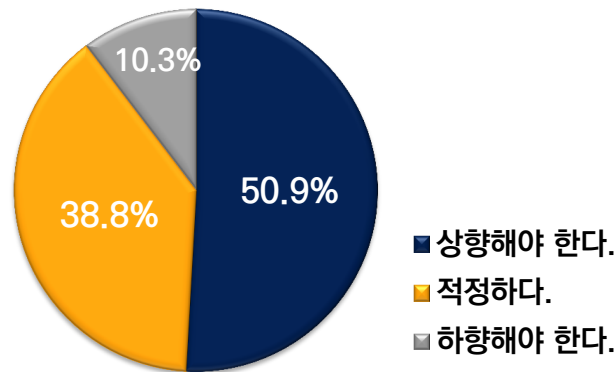
21.6% 더 내고 더 받는다.

- 더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더 내고, 더 낸 만큼 추후에 많이 돌려받아 노후의 삶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 다른 선진국들도 보험료율이 높으며, 씨드 추가 없이 수익을 더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기금 운영을 통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나중에 많이 받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6.9% 덜 내고 더 받는다.

- 사실 안 내고 안 받고 싶습니다.
- 뉴스를 통해 접했던 연기금의 투자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연금공단 내 인재유출로 투자수익률도 낮아지면서 연금 자체의 수익률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단순한 국민연금 수취액 인상보다는 수익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반발감이 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06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50.9% 상향해야 한다.

-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려면 은퇴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면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중장년층의 건강 상태, 학업 수준, 근로 의욕이 높은 만큼 은퇴 시점을 늦춤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65세 연령층의 분들의 보면 과거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양해야 할 존재가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8.8% 걱정하다.

- 65세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 외의 수입원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개시연령은 걱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면 자동으로 수급개시가 미뤄지고, 혹은 본인이 원한다면 수급개시를 더 나중에 할 수 있는 등 이미 유동적으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된 만큼 현행 연령은 걱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은퇴 연령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0.3% 하향해야 한다.

- 산업 간, 산업 내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퇴직 연령도 점점 하향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적인 퇴직 연령은 55세입니다. 단순히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만 고려하여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개시연령을 하향하되, 기존에 납부금액과 연동하여 비례세를 도입하여 수급할 수 있는 금액에도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토론

지정토론 - 1

윤 석 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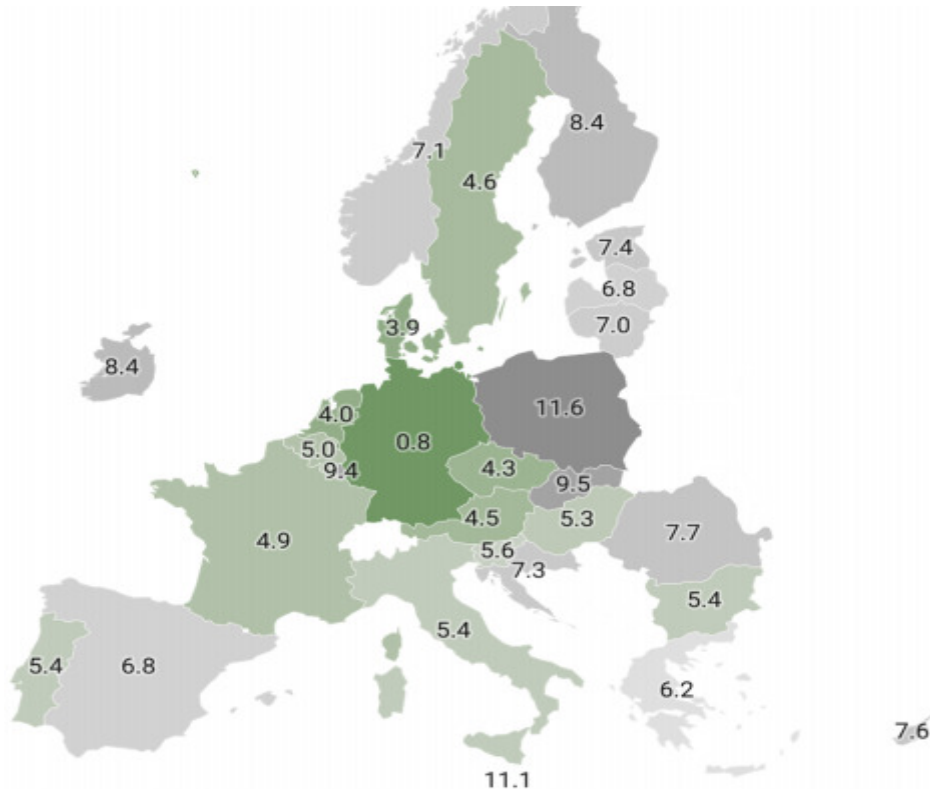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 우리 사회는 연금 이슈와 관련하여 지금 극심한 혼란기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어서입니다.

○ 최근 발행된 유럽연합(EU)의 Ageing report를 보면, 유럽 국가 대부분은 우리에게 비해 인구구조가 매우 양호합니다. 인구구조 뿐 아니라 연금제도 역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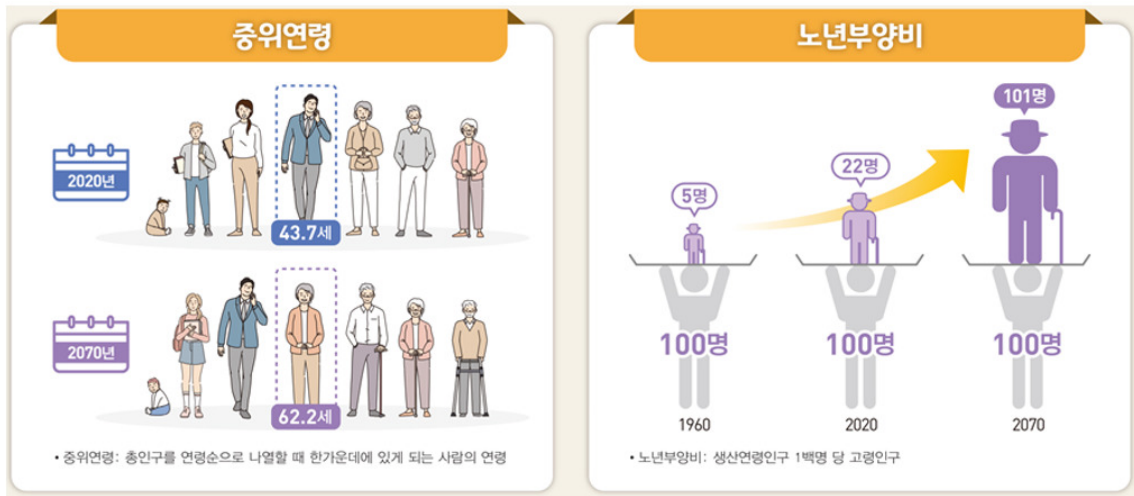
[그림 1] EU 회원국의 중위연령(Median age) 변화 추이 (2019-2070)



주: EU 회원국 평균: 5.1년 증가 (2019년 43.7세에서 2070년 48.8세)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1.

[그림 2] 한국의 중위연령과 노년부양비 변화 추이 전망 (2020 - 2070)



주: 중위연령 43.7세(2020년) - 62.2세(2070년)
 노년 부양비 100명당 5명(1960) - 100명당 101명(207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20-2070.

○ 우리에게 비해 인구구조가 연금제도를 운영하기에 훨씬 우호적인 국가들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표 1] 주요 OECD 국가들의 강제 적용 자동안정장치 개요

	적립식 DC	NDC	DB 또는 포인트 제도	재정, 인구통계, 임금과 연계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 연계	자동연계에 영향받는 소득대체율 비율
호주	○					99.8
덴마크	○				○	100
핀란드			○		○	100
독일				○		100
이탈리아		○			○	100
일본			○	○		100
한국						0
네덜란드				○	○	100
스웨덴	○	○		○		100

원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9, 윤석명 외(2020)에서 재인용

-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주변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함에도, 연금재정의 자동안정장치(Buil-in-stabilizer) 도입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독일의 연금재정 자동안정장치를 예로 들어 볼까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생율은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도 하락하면,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여건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2004년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연금 주변 환경이 악화되면, 연금수급자를 포함하여 자동으로 연금급여액을 삭감합니다.

-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스웨덴은 연금재정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였고
 - 일본과 독일은 2004년, 석유부국 노르웨이도 2010년 이후 이러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 우리보다 좋은 상황임에도 우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 높은 연금개혁을 이미 달성한 겁니다.

[그림 3] 일본의 2019년 공적연금 재정검증 내용

경제성장률 (실질) 2029년 이후 20~30년	소득대체율		경제전제	
	급여수준조정 종료 후의 표준적인 후생연금의 소득대체율	급여수준조정의 종료연도		
경제성장과 노동참여가 확대되는 Case	Case I	51.9%	(2046년)	0.9%
	Case II	51.6%	(2046년)	0.6%
	Case III	50.8%	(2047년)	0.4%
경제성장과 노동참여가 일정 정도 확대되는 Case	Case IV	(50.0%) (주) 46.5%	(2044년) (2053년)	0.2%
	Case V	(50.0%) (주) 44.5%	(2043년) (2058년) <small>기계적으로 급여수준을 조정할 경우</small>	0.0%
경제성장과 노동참여가 확대되지 않는 Case	Case VI	(50.0%)	(2043년)	▲0.5%

주: 일본 소득대체율 50% 보장은, 부부가 동시 받는 기초연금(국민연금)과 남편의 후생연금액 합계임.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의 Ueda Hironobu (2021), 윤석명 외(2022a)에서 재인용

- 우리사회에 만연한 포퓰리즘 정책의 원인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 국민연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보니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 우리 연금제도가 처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 우리 연금제도는 독일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 제일 먼저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60년 제도 도입 당시 급여수준이 관대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 2028년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할 국민연금 급여수준이었어요.
 - 그랬던 연금액 수준이 선거 때마다 올라가서, 1990년대초에 접어들면 수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급여제도가 되어 버린 겁니다.
 - 2015년 어렵게 공무원연금을 개편하였다고는 하나, 핀란드와 비교하면 지금도 연금급여 수준은 훨씬 높으면서도 부담하는 보험료는 훨씬 낮습니다.

- 2015년 일본이 그리했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동일연금제도, 즉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동일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 1800년대 중반, 은급제도로 도입되어 공무원이 보험료 한 푼 부담하지 않던 일본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이제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 현재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외에는 모든 회원국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통합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국민연금 개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 문제는 우리 공적연금제도는 서구 사회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만들었던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 거라는 겁니다. 제도 수용성 (또는 순응성) 때문이었습니다.

- 우리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무렵,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고치려고 했어요.
 - 소위 말하는 자동안정장치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혁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우리는 세대간 부양이라는 허울 아래 나중에 세금 걷어서 주겠다는 식으로 현재 우리 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그 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가 연금제도 운영을 배워온 국가들이 이미 20여년 전에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걱정도 팔자야’, ‘나중에 개혁하면 되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를 세대간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제도 성격을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는 한, 연금제도 파탄은 불가피합니다.
 - 연금제도 파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적자·부채가 누적적으로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 총당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도 1,500조원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주요 선진국은 우리처럼 무책임하게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반면에 우리는 연금제도 운영원리의 본질을 빼 놓고, “나라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줄 수 있다” 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 특히 오랫동안 연금개혁을 소홀히, 또는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그리스와 이태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들 나라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나라는 그대로 있지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부세력이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상황을 맞아, 고연금자의 연금액이 절반 정도 깎이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 전 세계에서 출생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연금 받을 노인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는 ‘낸 것보다 훨씬 더 받는 제도’ 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 환경은
 - 그리스와 이태리보다도 훨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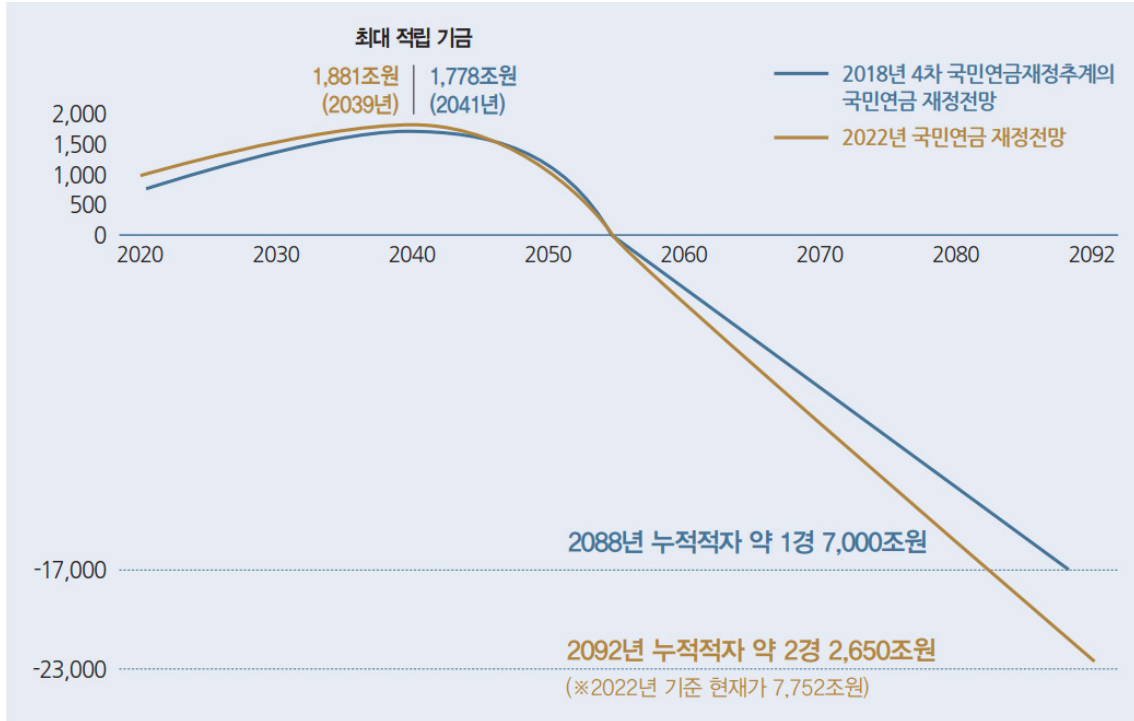
- 이런 상황에서도 세대간 부양이라는 이유를 들어, 나중에 세금을 걷어서 연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 그 좋던 시절, 특히 지난 24년 동안 보험료는 1%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으면서,
 - 26만명 태어난 세대(2021년)는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세금도 더 부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 이 정도 되면 연금제도에 대한 젊은세대가 느끼는 여러 단어들, “<시한폭탄>, <밀빠진독>, <세대갈등> ” 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 국민연금 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

- 우리나라 연금제도 현황에 대한 가감없는 자료, 즉 Fact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보다도 문제가 훨씬 심각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추계보고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 또 매년 막대한 규모의 적자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들 제도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추계보고서가 비밀에 부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에 내재된 미적립 부채, 즉 Unfunded liability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공무원, 군인과 달리 일반 국민은 국가가 사용자가 아니라서 정부, 국가의 책임이 없다면서 이러하고 있습니다.
 - 출생을 급락으로 인해 우리가 운영하는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재앙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사학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통령 선거 때마다 월 10만원씩 인상하자고 하는 기초연금은, 행정부에서조차도 장기 소요액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결산 보고서조차도 없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1/3이 OECD 빈곤 기준으로도 빈곤하지 않으며,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1/3은 극도로 빈곤한 노인들임에도 똑같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 비효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적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들 제도의 운명은 어찌될까요?
 - 지금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림 4] 국민연금 누적적자 규모 비교 (2018년과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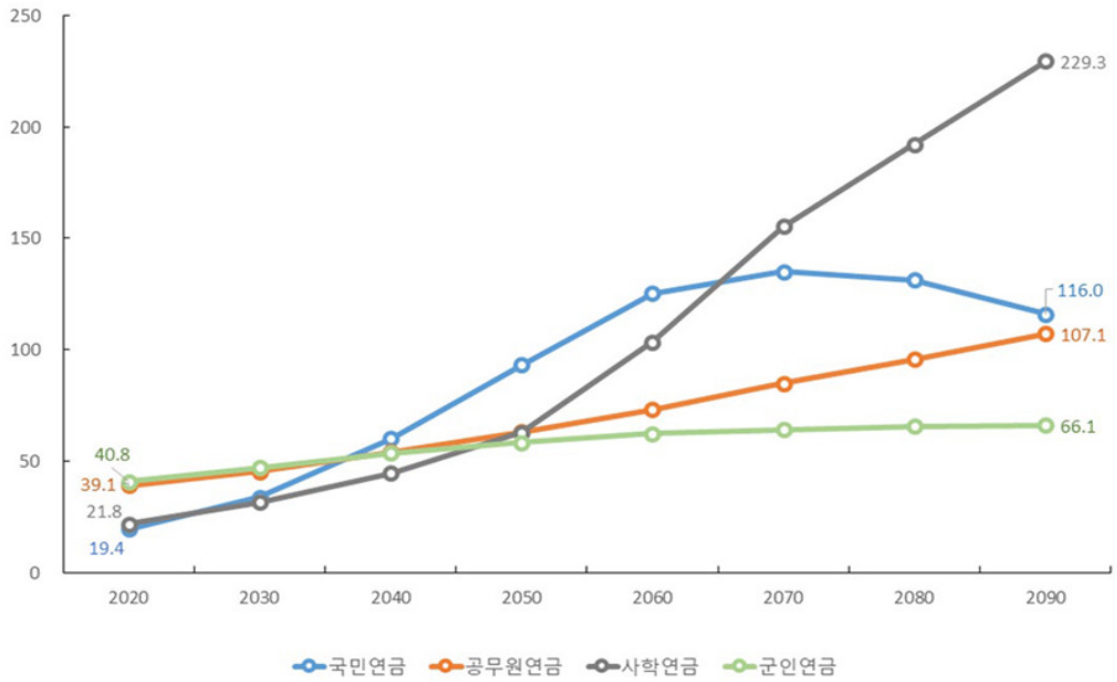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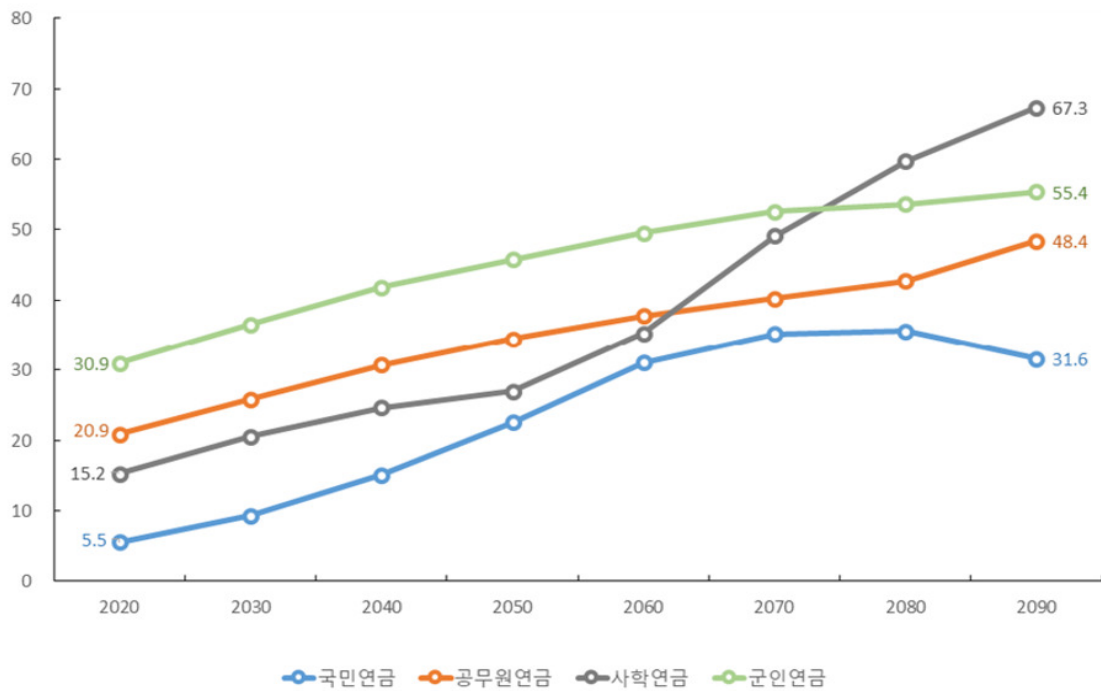
주 2088년까지 누적적자는 행정부의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결과를 반영하였음. 2092년까지의 누적적자는 2022년 필자 연구책임 과제 추계 결과이며, 최대 적립 기금은 1,881조원(2039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윤석명,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 『예산춘추』, 국회 예산정책처, 2022b.

[그림 5] 공적연금 부양비 추이



[그림 6] 공적연금 부과방식 비용율 추이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20.

- 우리 세대만 괜찮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다가, 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많을 겁니다.
 - 정치권, 즉 국회의원 상당수가 전직 판사·검사·고위관료들입니다.
 -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자신들이 받을 연금도 삭감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연금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국가들은, 연금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일례로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는 주요 연금 관련 회의록에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그것도 Full version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연금 관련하여 투명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연금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연금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가감없이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개혁의 절반은 이미 달성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 그 누구도 개혁을 반대할 명분, 개혁 시점을 늦추자고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혼란은 있겠지만, 또 고통스럽겠지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3.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기금 운용 원칙에 대한 견해

-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국민 전체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다 중요한 점은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 독일은 기금 운영수익에 의존하여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균형, 즉 보험료와 급여수준의 균형을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금 지급을 측면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 부담 측면에서는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우리보다 많게는 6배 이상, 현재도 2배 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 미국 사회보장제도인 OASDI는 민간경제 불간섭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여유 재원으로 정부 발행의 특별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노력도 필요하나, 중요한 점은 연금제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4. 기초연금에 대한 견해

- 최근 발간된 OECD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취약노인에게 더 지급 하라고 기초연금 제도 운영 방향의 개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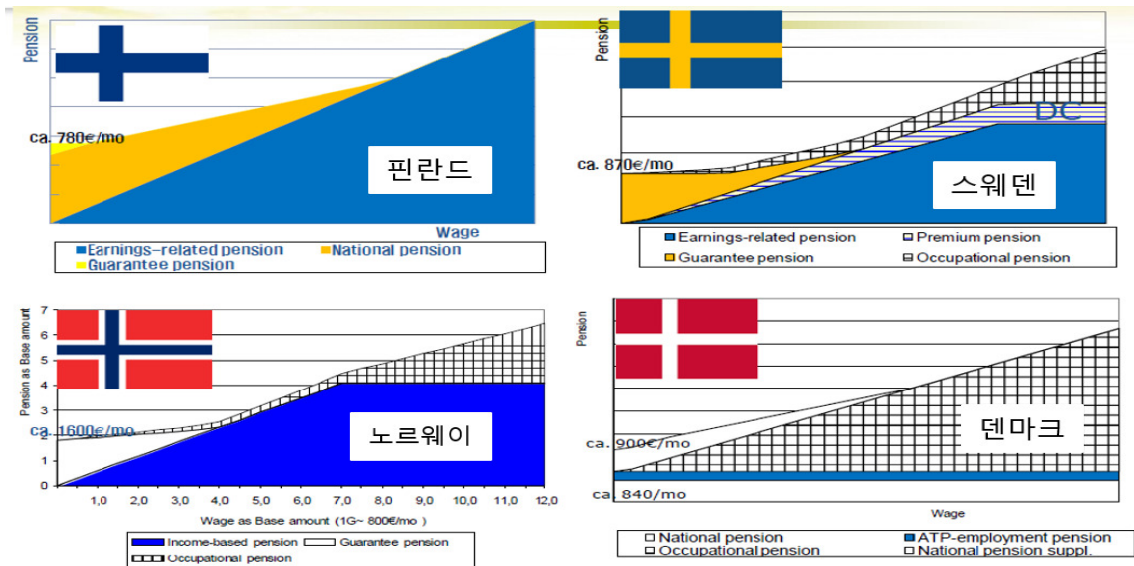


- 우리 기초연금이 투입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 Pursue a broad pension reform to secure adequate old-age income. In this context, conditional on the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onsider lowering the basic pension income threshold and increasing the benefit level to better target those with the highest needs.**
 - Raise the pension eligibility age further than currently legislated by 2035 and link it to life expectancy thereafter, and **align the maximum contribution age to the pensionable age.**
- 기초연금은 100%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인지라, 젊은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너무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가면서,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림 7] 노르딕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덴마크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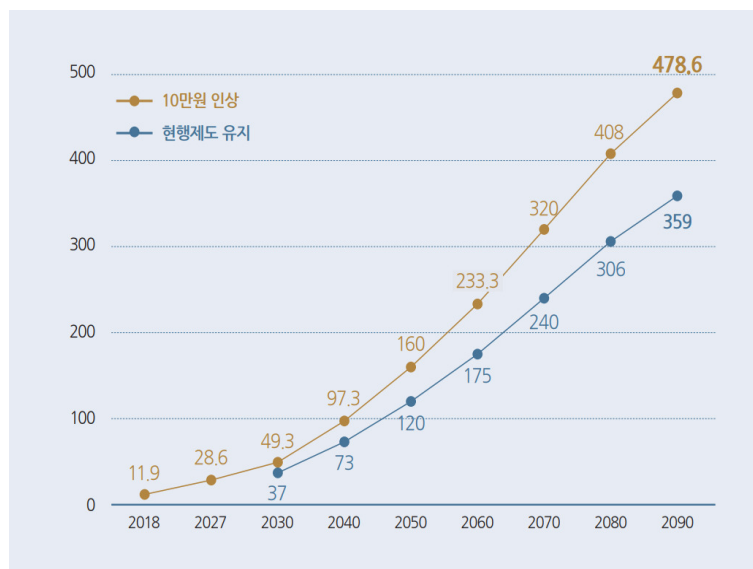


주: 덴마크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함. 지속적으로 전체 노후소득 중에서 민간운영 제도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추진 중

원자료: Finnish Centre for Pensions의 Ismo Risku, 윤석명(2022a)에서 재인용

[그림 8] 기초연금 재정추계 전망 (2018~2090년)

(단위: 조원)



주 기초연금을 현행대로 월 30만원 지급할 경우와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의 2090년까지 재정추계 결과임. 2018년과 2027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2030년부터 2090년까지의 재정추계는 필자 연구책임 과제의 추계결과(2022년 재정추계)임

자료; 윤석명,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 『예산춘추』, 국회 예산정책처, 2022b.

5. 국민연금 개혁방안

-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추어,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연금액을 차감하는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생애지급하는 총연금액은 동일하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받는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재정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편하자는 겁니다.

- 대신 노동시장 개편을 전제로, 퇴직 후 재고용(퇴직 전 월급의 40% 전후 수준을 받으면서 일함) 등의 조치를 통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일해서 줄어들 연금소득을 보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받는 시점의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 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핀란드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 우리는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 여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한 4-5% 포인트 정도는 빨리 올려야 합니다.
 -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 여러 정책수단들을 활용한 최적의 정책혼합(optimal policy mix)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토론

지정토론 - 2

전 병 목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 론 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 국민연금이 청년층에 불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부정적 반응의 원인이고
 - 청년층에 불리한 제도라는 것은 기성세대, 고령세대가 기여대비 높은 편익을 수혜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사실
 - 기여대비 고급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의 목적
- 그렇지만 개혁이 미루어지면 더 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즉 높은 기여-급여 비율(1.8배 수급)과 인구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은 향후 더 악화될 것임.
 - 정부재정의 투입역시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임
- 즉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연기비용은 더 커지게 됨
 - 빠른 개혁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합의 도출이 중요
 - 현재 수익비(급여/기여) 1.8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 세대는 연금급여의 55.6%만 스스로 조달
 - 여기에 대한 세대간 합의를 도출해야 연금개혁 추진 가능. 기성세대도 정확히 이해한다면 청년세대에게 많은 부담을 물려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함

2. 국민연금 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

- 연금개혁은 수지개선을 위해 더 높은 기여율과 급여의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 이는 청년층, 노인층 모두 원치 않는 변화이므로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권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
- 이해당사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개혁의 필수적이므로 연금수급자 규모가 늘어나기 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도 큰 재정위기가 닥치거나 혁신적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개혁에 성공하기 어려운 모습 보여줌
- 부분적인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스스로 저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부분적 개혁: 수급연령 상향조정(65세→67 또는 68세),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59세→64세) 등
 - 특히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가능
 - . 기초연금의 확대 범위를 보다 좁은 빈곤층으로 축소하는 방안, 퇴직금의 퇴직연금 의무화와 예외조건 축소 등

3.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기금 운용 원칙에 대한 견해

- 초장기로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안정성이 높은 우선순위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
 - 수익성은 안정성과 일정부분 상충관계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옴
- 다만 공공성 역시 국민연금 포괄범위와 수익성 등과 상당한 연관관계(+, -)를 가지고 있음.
 - 공공성에 대한 고려는 가입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중히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 특히 국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민간 시장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기금운용에서 지나친 국가주의가 나타날 문제점을 경계할 필요(예: 장기효과가 불확실한 낮은 수익성 사업에 대한 투자 등)
- 외국의 경우,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허용하는 추세. 즉 제도 운용과 분리하여(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시장을 통한 기금수익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4. 기초연금에 대한 견해

- 기초연금의 역할 설정이 중요(Targeted 강화)
- 기초연금의 경우, 정의상 보편성이 중요하나 보편성을 추구할 경우, 급여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보편성과 충분성을 확보하려면 매우 높은 부담률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방안임.
- 기초연금의 역할이 커지는 개혁안의 단점은 높은 일반재정 부담임
 - 납세자 수용성이 낮은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재원 활용방안임
- 기초연금의 수급수준이 높아지면 자영업부문 종사자, 저소득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유인이 더 낮아지게 됨
 - 임금분야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야 가입 회피 유인 증가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
- 급여의 보편성과 충분성이 충돌할 때 우선되어야 할 목표는 충분성
 - 우리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노후소득의 충분성이기 때문
 - 보편성은 세부담 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 있을 수 있으나, 인구고령화 추세 속 빠른 부담증가를 감안하면 재정 위험성 높이는 방안
-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소득하위 70%)을 확대하기보다 대상을 축소한 이원화된 형태 운영 필요
 - 기초연금 A(현행), 기초연금 B(추가분)로 구분하여 B는 빈곤계층(소득하위 30~40%)으로 축소하여 지원하는 방안 필요
 - . 국민연금 미가입(저기간) 은퇴자가 많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 . 미래세대의 부담도 현 구조개혁안보다 작아질 것임
 - 향후 노후 빈곤상황, 재정여건 등에 따라 B의 지급대상 조정 가능

5. 국민연금 개혁방안

- 국민연금 개혁의 비용은 시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함으로 빠르게 추진할 필요
 - 설문조사 결과는 부담을 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가 있음을 보여줌. 다만 어떤 형태로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서 차이(덜내고-덜받고, 현행-덜받고, 더내고-현행)
 - 수급연령 인상 등은 빠르게 시행 가능
-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은 결국 기여금 부담수준임
 - 다른 소득세 부담수준, 예상 연금대체율 등을 감안하여 기여율 상한을 설정할 필요

지정토론

지정토론 - 3

백 경 훈 대표
청사진

[토론문]

레고랜드 저리가라, '불신의 시한폭탄' 국민연금

백경훈 청사진 대표

1.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느낀 것

- 청년층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 * '전 국민 다단계, 낡은 동아줄, 해변의 모래성' 등 부정적 키워드로 인식
 - * 레고랜드 저리가라 할 만큼, 청년에게 국민연금은 '불신의 시한폭탄'

- 인식조사 결과에 모두 의미부여 하기는 어려우나, '청년에게 불리하다' 느끼고,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수가 공감
 - *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67.2%), 국민연금 개혁 시급히 필요(81.9%)

- 31.9%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이 꼭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국민연금 지급은 정부의 의무'로 보는 등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 있고, 낸 것보다는 더 받는 유리한 제도라 인식하는 경향도 엿볼 수 있어
 - * 국민연금, 청년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제도(27.6%), 유리한 제도(4.3%)

-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대해 '안정성(50%)' 강조, 비교적 보수적 입장
 - * "최소 원금 보장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 "지나친 수익성 추구해 국민 혈세 낭비하는 일 없어야"

- 선호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형태, 매우 다양
 - * 국민연금 설계 자체가 복잡하고, 일반 국민들이 일일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질문 의도와 내용에 따라 답변 달라질 수 있어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해야 한다(50.9%)' 다수
 - * "늘어가는 평균 수명 대비.. 근로기간 늘려야. 국민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급속한 고령화 대비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

2. 국민연금 개혁, 정치권의 모습은

- 국민연금 개혁 방기, 지난 정부의 역사적 과오
 - * 文,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기. 국민 눈높이 맞출 일과 정부가 결단하고 국민을 설득해야하는 일 따로 있어
- 현 정부, 의지만큼 따라주지 않는 지지율
 - * 尹, 대선 때부터 지속적 강조
 - * 국민설득이 필요한 일인 만큼, 지지층의 강력한 지원과 지지율 뒷받침이 되어야 뚝심 있게 끌고 가. 현재로서는 동력받기 쉽지 않은 상황
 - * 누구를 개혁의 수장으로 하고, 언제 가시화 할 것이며,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 중요
- 여야 모두의 뭉개기
 -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개월만에야 첫 회의 (여야의 현재 상태를 보여줌)
 - * 개혁의 당위성보다, 당장의 실익에 집중. 아무리 정부여당이라도 단독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 지지율과 선거 미치는 영향 먼저 고려
 - * 現 정치세력의 문제도 있지만, 선거 통해 대의 민주주의 하는 국가의 태생적 한계도
- ‘청년 정치인’ 머뭇, ‘소신 정치인’ 실종
 - * 젊은층 민심의 기저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응어리가 있지만, 응집된 에너지로 표출되지 않음. 국민연금 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이슈라 명쾌한 대응 쉽지 않아
 - * 소위 ‘청년 정치인’, 이슈를 주도할만한 힘과 이론이 뒷받침 안 돼. 제도권 들어가면 국민연금 이슈 쏙 빼놓고, 기성정치로 수렴해 가는 정치현실
- 지금 필요한 것은 ‘미움 받을 용기’
 - *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이 없어
 - * 국민들 쉽게 설득시키기 어려운 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당면 과제로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만든다는 사명감, 당위성 가지고 임해야
 - * 정부와 국회,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깃발 들고 나서진 않아

3. 국민연금 개혁,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는

○ 위원회 시스템, 분명한 한계

- * 각종 위원회에 청년, 취약계층 포함시켜 목소리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 다만, 대표자를 뽑아 앉혀놔도 전체 목소리를 대변 한다 보기 어렵고. 실제 논의되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비전문가가 팔로업하기 쉽지 않아

○ 정부, 열린 숙의의 장 마련

- * 지난 정부 초기 진행한 국민 숙의의 장, 문제점 보완해 활용할 필요.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일인 만큼 국민 공감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 * 목소리 큰 분들의 이야기만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세대, 계층, 지역 등 전국 구석구석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 모여 집단지성 발휘

○ 정당의 기능 회복

- * 정책 만드는 일선에 당사자들의 정돈된 목소리 담는데 한계 있어. 국민의 목소리 균등하게 담고 정돈되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정당
- * 특히 조직되지 않은 개인(청년), 일반적 여론 수렴 어려운 취약계층 맨 밑바닥 민심까지 다 끌어 와야

○ 녹색(green paper)와 백서(white paper)

- * 국민연금 개혁이 이념적·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 * 정책 대안을 명확히 담고 있으면서, 전 국민과 교감하며 설득해 갈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녹색(green paper)·백서(white paper)’ 마련
- * 문제점과 대중의 의견을 담은 녹색(green paper)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응책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간했던 독일 ‘산업4.0’과 ‘노동 4.0’의 사례 착안
- * 녹색(green paper) 제작에는 양적·질적 조사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 등의 목소리도 꼼꼼하게 반영. 백서(white paper)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종합적·합리적·미래지향적인 대응책을 최우선으로 반영
- * 비용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일 : 5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1천~2천억 가량 예산 소요. 대선·총선·지선은 때마다 수천억 예산 소요. 그만큼 비용 쓸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국민동의. ‘국민연금 개혁 녹색(green paper)·백서(white paper)’도 마찬가지

4.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생각

○ 세대 간 자원배분의 공평성·지속가능성 확보

: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솔직히 말해야

* 現 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 : 소득의 9% 내서, 소득의 40%를 받는 것? 지속불가능

* 국가 신뢰의 문제 : 적립식 → 부과식? 노인 부양위해(자신의 노후 위한 것×) 소득의 30~40% 가량을 보험료로 내야하는 상황이면, 사회적 합의 가능하겠나

* 폭탄돌리기로 가면 폰지사기로 전략. 국가에 대한 신뢰 무너지는 일

○ 국민연금, 만능해결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 노후소득보장 위한 다층적 대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 '최소한' 노후소득보장 위한 것, 그 이상의 역할은 자원 배분의 왜곡 가져와

* 국민연금, 형편 좋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 가져가는 구조. 노인빈곤 사각지대 메꾸기 기초연금의 기능과 역할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재설계

* 인구구조와 노동·산업시장 변화, 기초연금 등 다른 정책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설계

○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

* 열린 속의 장에서 세대·계층·지역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종합적·합리적·미래지향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 탈정치? 고도의 연금정치 필요!

지정토론

지정토론 - 4

이 동 학 前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토론문]

세대 간 형평과 공생을 위한 연금제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I. 중요한 3가지

① 신뢰

연금제도는 이전 세대의 노후를 현세대가 조력하는 구조. 우리의 인구구조는 다음 세대로부터 현세대에 대한 부양이 산술적으로 과중 될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성의 신뢰에 균열이 가고 있음

② 형평

기성세대가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것은 기대수명의 증가에서 기인함. 그러나 많이 내고 적게 받거나 연금제도가 달라져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주어지면 세대 간 형평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함

③ 공생

모든 세대의 노후는 존중받고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체계를 갖춰야 함. 비정한 노후와 허덕이는 청년 시기를 보내는 것은 모두에게 절망임. 세대 간 정의 차원에서의 새로운 사회협약이 세대 간 합의될 필요 있음

II. 청년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위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본 청년들의 인식조사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해됨

- 젊은 세대의 인식에서 현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는 지불하고 못 받는다는 위험부담 때문. 최소한 원금은 사수해야 한다는 마지노선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청년세대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책임과 빈약한 보장이 상수임

이에 따라 개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

- ① 더 내기 ② 덜 받기 ③ 늦게 받기

Ⅲ.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모습 평가

- 정치가 사회문제에 대해 타협과 협력의 모습은커녕 개혁의 필요성이 큰 사안도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미온적으로 다루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 연금개혁은 누구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정치 정쟁으로 삼아 상대의 개혁을 방해하는 모습 반복됨

Ⅳ.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들의 입장 반영 방안

- 의사결정 체계에 젊은 층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회 특위이므로 주로 기성세대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 존재(핀란드 미래위원회)
- 실제 생물학적 청년 연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성원이 중요함(독일 세대 간 형평위원회)

Ⅴ.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생각

*총체적인 <사회적 패키지 딜> 필요

① 연금 조정 기구 별도 구성하자

-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 정치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연금산정위원회’를 두어 자동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⑤번을 전제로 12%까지는 상향

② 연금 상한제 실시하자(고액 수급자)

-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는 때부터 연금 상한제 적용 지급

③ 노인 연령 70세~75세로 상향하고 은퇴를 없애자

- 60세 이후의 노동조건 제시를 통해 실제적인 은퇴를 없애고, 젊은 노동력이 기피하고 있는 산업군에서부터 적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는 자연 연장. 복지의 대상도 노인 연령 조정과 함께 재조정

④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50%까지 지급하여 노인 빈곤 대응

⑤ 기초연금은 한시적 제도로만 운용하고 선정 기준액을 고정

⑥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⑦ 퇴직연금을 노동연금으로 바꾸고 이를 노동시장 은퇴 이후 수급 제도화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약 력

사회자

-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고문 (前 국무조정실장)

토론자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백경훈 청사진 대표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사회 :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고문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주요 경력

- 국무조정실장(장관급)
- 중소기업특별위원장(장관급)
- 예산청장(차관급)
- 재정경제원 차관보, 예산실장
- 국립충주대학교총장
- 서울대법인 초대이사
-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 현) 天古법치문화재단 이사

토론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학력

- 미국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재정학, 미국 사회보장 전공)

□ 주요 경력

- 한국연금학회 (회장)
- 국민연금연구원(연구조정실장, 선임연구위원)
- World Bank (Regional Researcher)
- UN ESCAP (연금 분야 Consultant)
- 기초노령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학력

- 미국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KDI정책대학원 교수(2015)
-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5~2017)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2018~2024)
-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6~2023)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백경훈 청사진 대표

□ 학력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

□ 주요 경력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 현) 한국재정정보원 이사
- 현) 청사진 대표

토론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학력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
 - 국가기후환경회의 GYCC 자문위원
- 현) 쓰레기센터 대표

건전재정포럼

2012년 이래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자 재정 분야 전직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건전재정포럼은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각종 정책제안 및 공론화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국가운영전략에 대한 각종 연구와 시대에 필요한 Agenda Setter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학술적 접근을 지양하고 '공론(公論)의 장'에서 국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이를 통한 사회적 Impact를 추구합니다.

(07566)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등촌동, 강서IT밸리) 705호
T: 02-786-7799 Email: srpark@nsi.or.kr 홈페이지: www.nsi.or.kr

